경제 위기감의 본질과 대책

새해에 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국내 경제학자들의 '경제 시국 선언'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케 한다. 수출이 작년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가 6%대 성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에서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경기 침체 양상이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비 위축 현상은 연중 가장 큰 소비기라 할 수 있는 설 특수마저 실종시켰다. 게다가 연초부터 재발된 카드사의 경영 위기는 당분간 소비 회복을 기대조차 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기업들의 올해 연중 투자 계획은 지난 해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경영 계획상의 수치일 뿐이다. 내수가 무력증에 빠지면서 '고용없는 불임 성장'으로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실업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여건의 돌발적인 악화가 우리 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의 급등은 철강과 같은 중간재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르는 각종 소비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감소되어,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조류 독감과 광우병의 발발은 작년의 사스(SARS)에 대한 악몽을 되살림으로써 경제 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인 미국과 중국의 쌍둥이 적자와 과열 경기라는 불안 조짐들도 경제 심리를 오그라들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감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사회 갈등 구조의 고착화 현상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농경, 산업, 정보화 세대가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의한 의식과 문화의 세대차, 산업간 경기 양극화, 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 현상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증폭되면서 공멸의 위기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경제 위기 의식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자

리 대책을 하루가 멀게 내놓고 있으나 시중에서는 총선용 올인 대책으로 폄하하고 있다. 현실적 타당성과 중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대안 제시가 세간의 공감대 형성을 막고 있는 것이다. 벌써 다양한 국가 경제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의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은 그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고 단기 대책만 난무하는 것도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신뢰 회복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 우선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경제를 운영한다는 대 원칙하에, 중장기 경제 전략의 큰 틀 안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의 구체성 확보와 일관성 유지가 시급한 과제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과 고용 창출 및 물가 상승 압력 완화라는 현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소비적 지출에 의한 일회성 또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는 고용 창출 정책이나 수출 가격 보전을 위한 절하 일변도의 환율 정책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적정 환율 유지에 초점을 맞춘 보다 생산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도 하루속히 완화해야 한다. 신구 세대간·산업간 더 나아가 지역간 조화와 융합을 통한 상호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수립시 지역별 평균적 균형이 아닌 상호 협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간 유기적 전략 산업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경제가 5%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실업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노사정에 학연언이 포함된 '경제 위기 관리 대책반'을 가동하여 국력의 결집을 이루는 한편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 HRI

유병규 (bkyoo@hri.co.kr ☎ 3669-4032)